VISION 4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신바람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의 뿌리, 중소기업

11 국제경쟁력 있는 미래형 중소기업, 내실있게 육성하겠습니다.

'글로벌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중소기업의 힘'

- 국제경쟁력 있는 미래형 중소기업 육성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의 서비스산업 및 신성장동력 진출 지원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실효적 추진
- 중소기업사업에 대해 유비쿼터스 서비스 지원
- 중소기업의 기본적인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해결
- 창업환경 개선과 신기술 창업기반 마련
- 원자재 수급의 안정화 지원
- 규제완화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환경 조성
- 중소기업을 위한 '개방형 혁신 R&D 네트워크' 구축
- 현장감 있고 효율적인 미래지향적 정책 추진체계 확립
- 중소기업경영 지원서비스 부서 통폐합

12 중소기업, 자금조달이 쉬워집니다.

'자금난 완화로 사업의욕 고취'

- 금융담보물 대상에 동산 · 지적재산권까지 확대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채널 다양화
- 미래성장가치 위주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
- 성장형 중소기업 자금 지원
- 벤처캐피털에 연기금 등의 투자 확대
- 사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자금 · 컨설팅 · R&D 지원

13 중소기업,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세제감면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지원'

- 중소기업 법인세부담 경감,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 대폭 인하
- 중소기업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과감하게 확대
- 가족형 중소기업 가업상속시 세제지원 대폭 확대

14 납품중소기업의 피해방지, 제도화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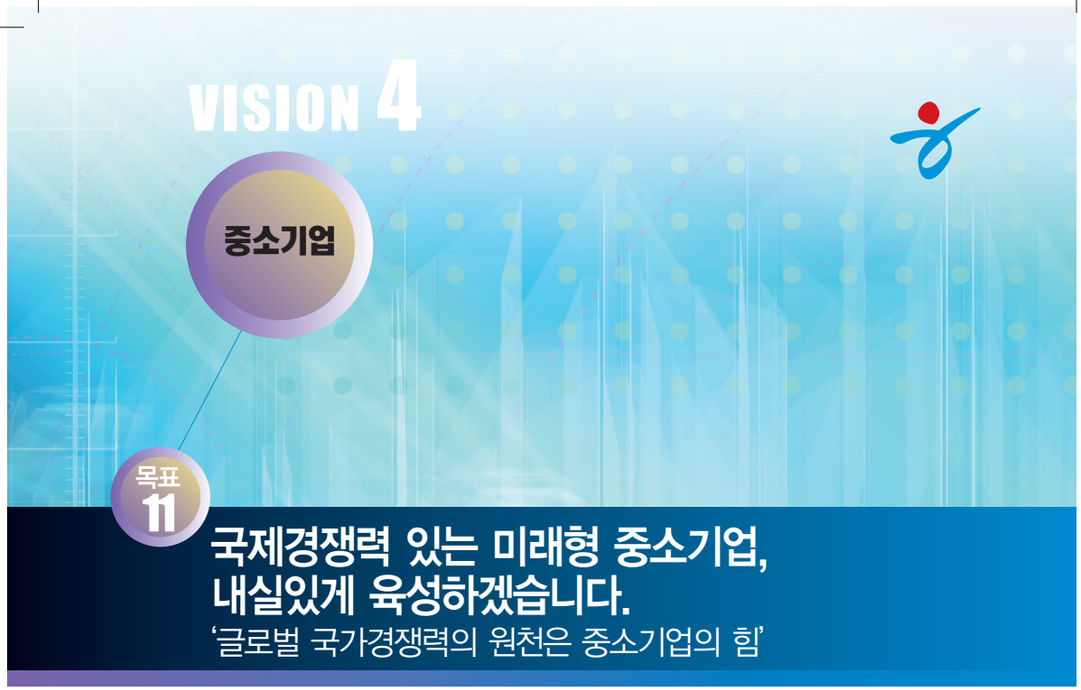
'공정거래로 강한 중소기업 만들기'

- 원자재가 · 납품단가 연동제 검토
- 하도급법 적용대상 확대 및 심사방식 개선
- 하도급분쟁 심사방식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 추천권 부여

15 중소기업 마케팅과 해외진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로안정, 수출 · 해외진출 촉진'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활성화
- 환경시설공사 입찰제도 개선
- 자금인력 등 해외자원의 국내 중소기업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 국제화
-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공공부문 지원 강화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인프라 확충
- 벤처기업의 글로벌시장 전략적 진출 지원



국제경쟁력 있는 미래형 중소기업, 내실있게 육성하겠습니다.

'글로벌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중소기업의 힘'

국제경쟁력 있는 미래형 중소기업 육성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되고 무역이 자유화·개방화됨에 따라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도 국내외 시장에서 외국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이 스스로 글로벌화·차별화하는 등 새로운 여건에 신속히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 글로벌시장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스타기업'(1억 달러 이상 수출 기준)을 현재의 200개 수준에서 2012년까지 500개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관부처, KOTRA, 무역협회 등 수출 지원기관, 한상협력재단 등이 연계지원 체제를 강화하여 기술개발, 자금·경영·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기반 중소기업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정부 및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R&D 지원자금을 확대하고 기술역량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규모를 2007년 3,600억 원에서 2012년에는 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R&D 지원사업(KOSBIR) 규모를 2조 원 수준으로 높여 벤처, 기술기반 중소기업이 KOSBIR 사업을 통해 국방분야 등 첨단 기술개발 사업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지방중소기업을 지역특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회생·신설 프로젝트 추진, 중소기업의 지역특화업종으로의 전환, 지역 중소기업 클러스터화 촉진 및 농공단지 등을 활용한 지역특화 산업단지 육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향토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산업화, 사업화, 고부가가치화, 브랜드화 등 패키지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중견기업화를 통해 경제구조를 튼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M&A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화를 유도하고 중견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 중견기업형(원천·핵심기술) R&D 프로그램을 신설, 지원하고 선진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겠으며 중견기업의 독자 브랜드·디자인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FQ)04한 나라 본 책(134~177) 2008.3.29 4:16 AM 페이지138 western

선택과 집중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현재 중소기업정책은 제한된 재원으로 많은 기업들을 지원함에 따라 재원의 경제적 효과가 미흡, 중소기업 전반의 하향평준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추진해 온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중소기업정책을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지원이 피부에 와 닿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책자금 운영을 미래 성장가치 위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메자닌방식의 성과공유 대출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기술개발(R&D)은 중소기업의 사업성을 중심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기술로드맵'에 따라 선정된 500개의 미래선도기술 및 수출유망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으며,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융·복합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이행실태 및 하도급 관리·감독, 시정요구 권한을 부여한 '구매지원관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07년 62조 원 → '12년 100조 원)하되 중소기업자간 경쟁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서비스산업 및 신성장동력 진출 지원

서비스산업으로의 이행은 세계적인 조류로서 우리 경제도 서비스 중심 경제로 빠르게 이행하고는 있으나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절반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은 유망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제조업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컨설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컨설팅 R&D센터를 운영하는 등 컨설팅산업 기반을 강화하겠으며, 건물청소·경비·전산 등 단순 서비스업에 한정된 공공구매제도의 용역범위를 디자인, 광고 등 지식서비스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유망 중소서비스업에 대한 자금·기술개발 등 경영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식서비스분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08년 1000억 원)하고 신사업 모델 개발, 선진물류 유통시스템 구축 등 타 업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중소서비스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서비스분야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전환을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500개 사업전환 유망업종(세분류)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사업전환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전환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FQ)04한 나라 본 책(134~177) 2008.3.29 4:16 AM 페이지140 western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실효적 추진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외형에 비해 내실이 미흡하고 대기업의 추진의지도 지속적이지 못하여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도 극히 낮은(중소기업연구원 조사로는 13.4%) 상황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실효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현행법상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 '상생협력지수제'를 의무사항으로 전환하고 활용방안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생협력지수에는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의 추진 정도, 수·위탁거래 공정화 정도, 상생협력 추진체계 및 임직원의 자세 등이 객관성있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등급 기업에게는 세제·금융 등 정부정책 및 사회 전반에 걸쳐 각종 혜택을 받도록 하여 사회적 공신력이 인정되는 '상생협력지수제'를 개발, 정착시키겠습니다.

■ 또한 '업종별 상생협력위원회' 회의의 정례화 및 상생협력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협력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완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산업별·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생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사업에 대해 유비쿼터스 서비스 지원

유비쿼터스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이 이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생산·판매·인력관리 등 경영관리 전반에 유비쿼스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제조공정연계시스템 등 수요자(대기업) 연계형 시스템구축을 지원하며 산업별 중소기업용 관련 S/W, 디지털경영 프로그램을 공급하겠습니다.

■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문화·레저·관광·건강산업 등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토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농수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취급 제품의 고급화를 추진하고, 고객이 필요한 시점 또는 장소에 배달하는 유통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공동물류창고의 유비쿼터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 소상공인의 e-learning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기술교육 e-learning도 추진하고 직종별 온라인 멘토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FQ)04한 나라 본 책(134~177) 2008.3.29 4:16 AM 페이지142 western

중소기업의 기본적인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해결

중소기업의 5대 기본 애로사항인 자금·인력·기술·입지·판로 문제는 중소기업정책의 숙원 과제로서 단시일 내에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국가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분야별로 보다 나은 혜택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개선 및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 금융과 관련해서는 정책자금(3조 원 수준), 신용보증·기술신용보증 수준을 확대해 나가고 정책금융·보증의 장기화(1년→3년)를 유도하겠습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투자관련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100여 개의 준조세를 대폭 정비하고 유사·중복 부담금은 통폐합하며 부담금 등과 관련된 부과기준, 부과액, 행정적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기술과 관련해서는 현장 R&D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현장기술에 대한 R&D지원과 생산성 향상 컨설팅을 실시하고 금형·단조 등 제조기반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업종·기술융합업종으로의 사업전환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인력애로 개선을 위해서는 공고, 전문대, 대학, 훈련기관 등을 지역산업에 적합하게 특성화하고 업종별 협회·조합 등 단체와 공고·대학 등 교육훈련기관의 협약을 통해 기술·산업 분야별 인력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인 현장훈련센터를 산업단지 등 접근도가 높은 지역에 운영하고 산업협의체를 중심으로 중소·대기업 공동훈련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프라이드 정책을 추진하여 일정기준의 중소기업 근무와 교육훈련 참여를 대학 학위 취득과 연계시키고 근로자 경력카드를 통해 복지혜택을 확대하여 국가가 경력관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신기술제품의 초기시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 또는 제정하여 공공구매시장 집행력을 강화하고 구매계획 작성기관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임대형 민자유치사업(BTL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공사용 주요자재의 정부 직접구매(관급자재로 공급)를 확대·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연쇄하청에 따른 저가입찰과 부실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대기업의 협력입찰제(상생입찰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에게 적정 이윤을 보장하겠습니다.

■ 입지애로를 경감하기 위해 50~100만 평 규모의 대규모 장기 임대공단을 산업발전이 취약한 광역자치단체에 구축하겠습니다.

(FQ)04한 나라 본 책(134~177) 2008.3.29 4:16 AM 페이지144 weste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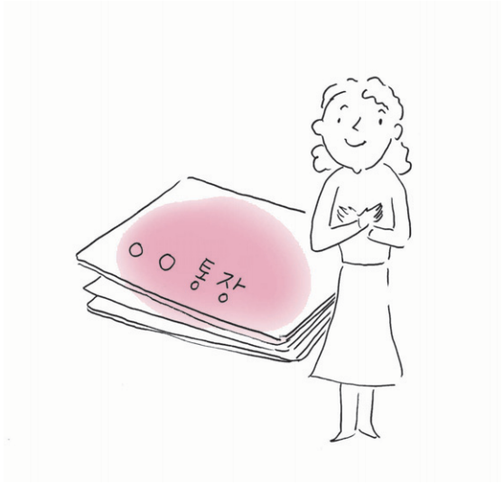
창업환경 개선과 신기술 창업기반 마련

'고용없는 성장',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고용창출문제의 해결책은 '창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은 178개국 중 110위로 주요 경쟁국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최저자본금제' 폐지 등 기존 추진과제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법인설립 On-line시스템 구축' 등으로 창업절차 및 비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대법원, 국세청 등의 전산망을 창업자가 한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연계하겠습니다.** 1인회사 감사 선임의무 면제, 유사상호 금지규제 폐지, 정관·의사록 공증제도 완화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저자본금제 폐지, 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 확대, 수도권 창업기업 등록세 면제 또는 3배중과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중기청에 '창업지원반'을 구성하여 법인 설립시 필요한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절차를 대행하겠습니다.

■ **벤처캐피털을 통한 창업투자 확대 등 원활한 창업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모태펀드 조성규모를 2012년까지 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 창업기업에게 창업투자보조금('08년~'12년 : 1,502억 원)을 지원하고 벤처창업자금을 확대('07년 : 6,000억 원→'08년 : 6,400억 원)하며, 벤처캐피털 및 개인투자자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겠습니다.

■ **창업절차를 간소화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신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계류중인 최저자본금제 폐지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며 행정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법령 개정을 독려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224개 대학, 4,300개 보육실)를 확대·개편하여 보육역량을 강화하고 대학 및 연구소 보유기술을 활용한 직접 영리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교수와 연구원의 창업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08년 : 20억 원)



(FQ)04한 나라 본 책(134~177) 2008.3.29 4:16 AM 페이지146 western

원자재 수급의 안정화 지원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가격은 급격히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결국 수탁기업의 채산성 악화, 수탁기업의 납품중단, 수탁기업 경영애로의 악순환을 거치고 있어 원자재 가격의 납품단가 연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 대·중소기업간 납품거래시 원자재가격 등의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을 제도화하겠습니다.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유형'에 원자재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며, 모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가 2~3차 협력업체에게 확산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원자재 수급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중기청이 원자재 수급실태 조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발굴한 애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결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자금(1,750억 원)의 80%를 상반기 중 조기집행하고 자금 소진시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 관계부처와 주요 원자재 매점매석 행위를 합동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원자재가격 변동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원자재가격 변동보험)의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환경 조성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 규제개선에 대한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겪는 규제는 대기업과는 달리 규제비용의 체감도가 크게 상이합니다. 따라서 제로베이스에서 기업규모별로 규제를 달리하는 미국식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하여 규제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정책의 실효성 평가 및 미비점 발굴·보완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옴부즈맨을 지정하겠습니다

■ 회생 및 재도전 프로그램을 가동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회생 및 사업정리 촉진방안을 마련하고 벤처 패자부활제를 통해 정직한 실패 기업인의 경영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휴면법인실태, 법정도산 기피사유 및 장애요인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원활한 법정청산 지원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또한 부실중소기업의 회생 및 사업정리 유도를 위한 '회생 및 사업정리 정보시스템'(가칭) 구축 및 상담,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자금 및 컨설팅을 동시에 지원하는 '구조조정 촉진자금' 설치(회생특례자금의 개편)를 추진하겠습니다.

(FQ)04한 나라 본 책(134~177) 2008.3.29 4:16 AM 페이지148 western

중소기업을 위한 '개방형 혁신 R&D 네트워크' 구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는 매우 높지만 자금과 인력 등 열악한 여건으로 개별기업이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지식경제부 산하기관(48개) 등 정부 산하기관들이 가동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R&D 장비들을 상호 연계하여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기술표준원 포함) 48개 기관 보유장비 : 1만 3,400종, 2조 5,000억 원 추정

현장감 있고 효율적인 미래지향적 정책 추진체계 확립

그동안 기업환경개선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왔으나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실제 느끼는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컸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현장을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문제점들을 해소하지 못해 아쉽다는 불만이 컸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는 새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규제 전봇대 해제' 등 규제개혁의지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현장밀착형 정책의 전달 및 현장 맞춤형 애로 해소를 위한 전략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청 내에 기존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현장애로 대책반을 운영하여 현장애로를 파악하고 이를 심층분석하여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정책 정보제공시스템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화' 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정책고객을 업체특징, 혁신형 구분, 기업규모, 성장단계, 관심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중소기업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관련 정보망간 정보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고 CRM(고객관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정책정보체계에 더하여 휴대폰을 통한 맞춤형 정보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 한번만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다른 사업지원시 동일한 서류를 제

(FQ)04한 나라 본 책(134~177) 2008.3.29 4:16 AM 페이지150 western

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시 요구하는 서류양식들을 통일화·표준화·DB화하고 업체선정과정 관련 정보 및 선정결과를 Push서비스로 제공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고객에 맞는 정책정보 발송을 위해 정책고객 DB화 및 다채널을 통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 지원서비스 부서 통폐합 / 글로벌경쟁력 강화가 최우선

부처별로 유사정책의 경쟁적 생성과 칸막이식 운영으로 사업간 연계 미비, 유사 · 중복 등으로 복잡한 기관들이 비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2008년 1월 기준으로 중소기업지원제도가 무려 1,361개에 달하고 있습니다.(중앙행정기관 952개, 지자체 409개) 이로 인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효율적이고, 중복·낭비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선진국 경제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행정네트워크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정책을 중소기업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족도를 높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중앙행정 차원에서는 유비쿼터스시대에 맞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중소기업시책과 관련된 많은 기관들 간에 유기적 협조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금융·세제·기술·정부구매 등 모든 기업에 대한 지원 정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공유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국내 지역별 및 주요 해외 도시별로 주재해 있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들이 함께 근무하며 역할을 분담하고 협조하는 수요자 지향형 'Information Center' 겸 'One-Stop Service Center'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지원 집행기관 간의 조직 · 기능 조정도 검토하겠습니다.

■ 정부 모든 부처의 정책 우선순위를 중소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

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세계시장을 목표로 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여 글로벌 스타기업을 창출해 내겠습니다. 유사중복 사업은 기능별·규모별 특성을 감안하여 통합하고, 지원효과 및 지원기업수가 적은 소액사업은 통합 내지 폐지하겠습니다. 한편 경제부처 외에 중소기업과 관련이 많은 비경제부처(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행정안전부 등)에도 기존 조직과 인력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지원전담부서를 두도록 하여 원활한 부처간 협조가 이루어지고 중소기업의 민원처리가 용이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담보물 대상에 동산·지적재산권까지 확대

부동산 등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담보·보증 위주의 대출관행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조달 및 장기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담보제공능력은 낮은 반면 신용리스크는 높고 재무상황에 대한 신용평가 인프라는 미비한 현실입니다.

■ 동산 지적재산 등 담보물건의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동산, 외상매출채권, 지적재산(특허권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보가치가 적고 변동성이 큰 동산은 집합자산으로 등록한 뒤 담보로 활용하는 '동산담보등록제도'를 도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FQ)04한 나라 본 책(134~177) 2008.3.29 4:17 AM 페이지154 western

■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의 연계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소규모 기술개발자금이나 설비투자자금을 필요로 하는 '혁신기업'을 정책금융 지원대상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투·융자 및 보증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 금융기관과 보증기관, 상업 금융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종합정보 풀을 구축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정책 전담은행을 지방은행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기업은행에 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정책 전담은행업무를 지방은행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이 지역현실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채널 다양화 / 중소기업 자금조달 다변화

고유가 등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 대출기피현상으로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만성적인 자금난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들의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지원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창업 → 성장 → 성숙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 직·간접 금융, 신용보증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자금지원체제를 전면적으로 바꾸겠습니다.

■ 원자재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원자재 값 폭등으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석유화학, 철강 등 관련업종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자금이 우선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관들의 보증이용기간이나 보증규모의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특례보증도 시행하겠습니다.

(FQ)04한 나라 본 책(134~177) 2008.3.29 4:17 AM 페이지156 western

미래성장가치 위주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

중소기업 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미래성장가치가 높은 기업을 발굴, 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 **정책자금의 기술성을 미래성장가치 위주로 운용하겠습니다.** 메자닌방식(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성과공유 대출제도'를 시범(200억 원) 도입하겠습니다. 기술우수 중소기업 회사채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08년 2,000억 원)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R&D를 사업성 중심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미래선도기술 및 수출유망품목의 지원비율을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융·복합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을 강화하겠습니다.('08년 150억 원)

■ **구매조건부사업, R&D와 투자 연계, 대학 및 연구소 기술사업화 펀드 결성(모태펀드 출자)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벤처캐피털 등 민간 투자자금과 공동투자하는 '기업제안형 투자연계과제'를 신규 도입(200억 원)하고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기관을 확대('07년 83개→'08년 100개)하겠습니다.

■ **현장 맞춤형 인적자원을 양성하겠습니다.** 공고생과 중소기업이 취업협약을 체결,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는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08년 95억 원). 중소기업 수요를 반영한 청년층의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참여대상을 주부, 군 장기 복무 제대자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08년 2,250명) 또한 전문계고와 전문대를 연계하여 예비 장인 양성을 위한 '기술사관학교'(가칭)를 도입하겠습니다.

■ **공공구매를 중소기업자간 경쟁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이행실태 및 하도급 관리·감독, 시정요구 권한을 부여한 구매지원관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FQ)04한 나라 본 책(134~177) 2008.3.29 4:17 AM 페이지158 western

성장형 중소기업 자금 지원 / 중견기업 육성

중소기업을 벗어나면 각종 지원혜택이 사라지고 규제가 강화되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성장형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신용대출 및 직접금융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민간금융회사의 신용대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on-lending제도를 도입하고, 자본시장에서 간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보증(CDO보증)을 운용하겠습니다.

■ **신성장산업 중심의 전문시장 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성장형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래소 내 전문시장 개설('네오코스닥 시장')을 검토하겠습니다. 새로운 전문시장의 진입·퇴출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공시 등 상장유지 부담도 최소화하여 중소·중견기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벤처캐피털에 연기금 등의 투자 확대 / 창업단계 중소기업 금융지원

공모주식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은 거의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비중은 극히 미미합니다. 벤처캐피털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 **벤처캐피털에 연기금 및 기관투자가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유도하여 벤처캐피털의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유도하겠습니다.**

■ **창업초기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투자조합의 존속기간(평균 5년)을 미국의 10년 수준으로 장기화하여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하겠습니다.

■ **프리보드 시장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공모시장 진입의 전 단계로서 프리보드의 비상장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관련 서류 면제,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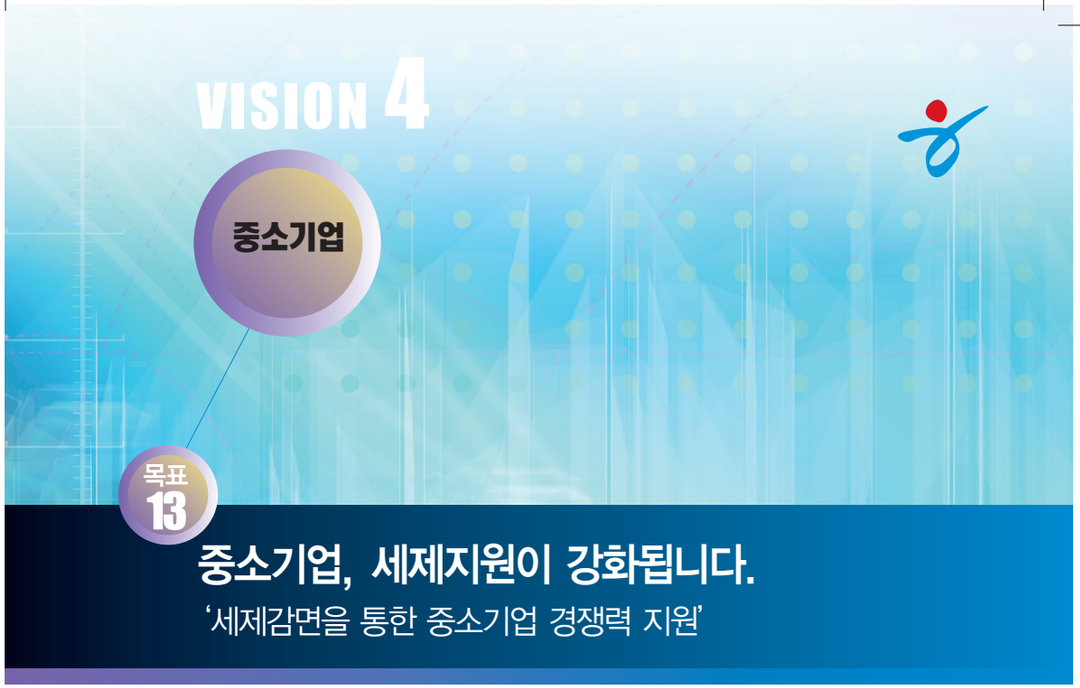
사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자금 · 컨설팅 · R&D 지원

최근 기술발전, FTA, 중국 등 후발국과의 경쟁으로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사업전환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사업전환의 저변확대를 도모해야 합니다. 사업전환 정보제공을 위해 제조업 22개 업종의 업황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업종을 더욱 세분화하여 제조업 500개 업종의 업황자료를 구축하고 사업전환을 계획하는 업체 등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제조업 22개 업종(500개 세분류 업종)에 대한 지역별 경쟁력 우위 업종 등 사업전환 유망업종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별 검색, 업종별 검색, 표준코드별 검색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DB화하겠습니다.

- 자금 · 컨설팅 · R&D 등의 종합 지원으로 성공적 사업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사업전환 자가진단,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R&D 및 설비운영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여 성공적 사업전환을 이루겠습니다.

- 사업전환 지원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사업전환 지원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사업전환촉진법」 개정)



중소기업 법인세부담 경감,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 대폭 인하 /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 인하

중소기업이 세금걱정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인세부담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법인세 낮은 세율을 현행 13%에서 1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금액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최저한세를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FQ)04한 나라 본 책(134~177) 2008.3.29 4:17 AM 페이지162 western

중소기업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 5년→8년

대기업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수익성이 높아진 반면, 중소기업은 아직도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 한해 결손금이월 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이 안정되게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과감하게 확대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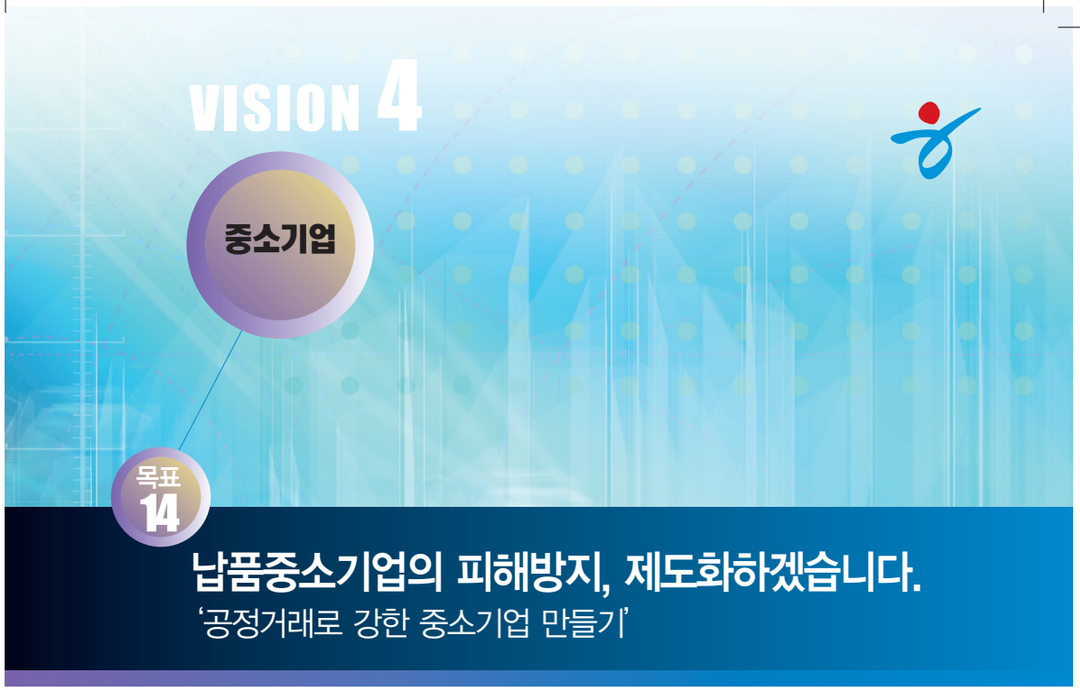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R&D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고 연구비 지출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R&D투자세액공제의 환급을 허용하는 등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가족형 중소기업 가업상속시 세제지원 대폭 확대 / 가업상속 활성화

국가경제의 성장기반인 가족형 중소기업에 대해 가업상속시 상속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승계받는 상속인이 성공적인 경영을 통해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고용이 안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시 상속세 공제규모를 확대하고 연부연납제도 등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창업자가 고령 등으로 사전에 가업을 상속(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여 해당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가 · 납품단가 연동제 검토 / 협력기업 인센티브 강화

납품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증가요인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상생협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현금결제, 공동연구개발 등에 세액공제 확대)하겠습니다.

(FQ)04한 나라 본 책(134~177) 2008.3.29 4:17 AM 페이지166 western

하도급법 적용대상 확대 및 심사방식 개선 / 중소기업 보호정책 강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제한되어 공정한 하도급거래의 사각지대가 많아짐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적극적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도급법에 대한 심사방식, 적용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하도급사업자 요건을 매출액 기준 20억 원을 하향조정하여 하도급 업체의 권익보호 등 하도급정책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 파급효과가 큰 하도급분쟁의 경우 공정위 심의에 앞서 분야별 원사업자와 수급자로 구성된 업종별 하도급심사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하도급거래의 현실과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충분히 파악함으로써 법집행의 현실 타당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하도급분쟁 심사방식 개선 / 중소기업 피해 구제책 강화

하도급 신고사건의 경우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1명으로 구성된 소회의에서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 하도급거래의 실정 및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하도급거래의 현실파악 및 수급사업자 등 하도급거래 관련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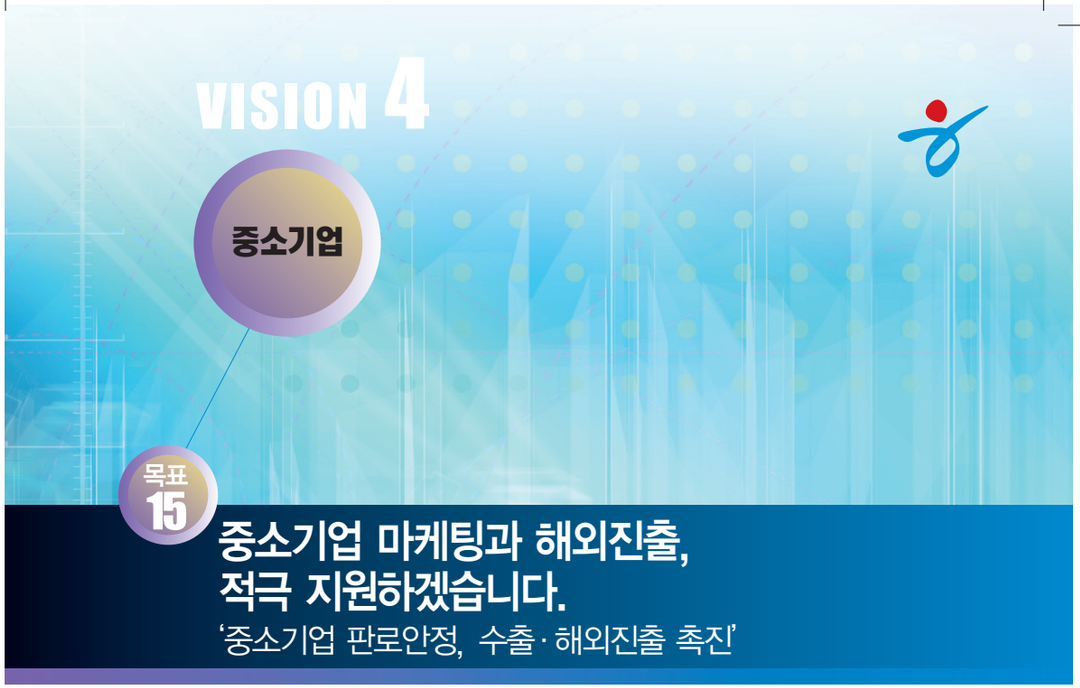
- 관련 분야별 · 업종별로 5~10개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정 하도급거래의 현실과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하도급사건 심의에 앞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법 집행의 현실 타당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 추천권 부여 /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납품대금 현금결제', '성과공유제' 실시 등 업계 전반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나 제도의 정착이 아직 미흡하여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요구와 특허관련 자료의 요구 등 불공정거래 관행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 대기업의 확고한 공정거래 실천의지와 정부의 지원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중 1인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활성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사업화하여 신제품을 출시해도 소비자들은 기술적 의심과 낮은 기업 및 제품 인지도로 구매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구매조건기술개발,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기관 구매자들은 중소기업제품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제로 2006년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은 6.9%에 불과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확대 및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신수요 창출과 구매를 확대하겠습니다. 구매기관의 확대, 사업기간의 연장(현재 2년) 등 구매조건부 기술개

(FQ)04한 나라 본 책(134~177) 2008.3.29 4:17 AM 페이지170 western

발사업의 추진방식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국방·환경·에너지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시 기술개발제품 신수요 창출 및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임대형 민자유치사업(BTL) 소요자재의 직접(분리)구매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 공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2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채널 및 인터넷쇼핑몰 개설 등을 통해 중소기업상품판매를 지원하겠습니다.

환경시설공사 입찰제도 개선 / 대·중·소기업간 협력시스템 도입

선진국들의 환경규제 강화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물·생물 산업 등 신규환경산업 창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철강·IT 등 주력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환경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기업과 중소 환경산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시장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기술 기반 환경전문업체가 적정단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 위주의 환경시설공사 입찰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 환경산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시장구조도 개선시키겠습니다.

■ 탄탄한 내수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사업영역을 민간에 이양하고 환경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대기업의 적극적 환경산업 진출을 유도하겠습니다.

(FQ)04한 나라 본 책(134~177) 2008.3.29 4:17 AM 페이지172 western

자금인력 등 해외자원의 국내 중소기업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 국제화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중소기업도 유리한 조건의 자원조달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 인력, 기술 등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자원을 중소기업도 유리한 조건으로 확보하여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국내 벤처펀드의 해외자금 유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민간 출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완화(50%→40%), 외국인 출자조합의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우대(30%→40%)하겠습니다. 벤처캐피털의 해외투자 한도(40%)를 폐지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기술인력 도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제조업 및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에 외국의 박사·석사·학사 기술인력 도입 및 활용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 국제산학연 공동R&D(일본의 규슈공대 등) 도입 및 퇴직 교수·연구원 활용의 R&D를 신규 추진하겠습니다('08년 40억 원). 국내 대학(연구기관)이 중소기업과 외국대학(연구기관)간 연계역할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2년간 4억 원)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공공부문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우리나라 총수출 중 비중은 2001년 43%에서 근래에는 32%로 크게 하락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그리고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내수위주의 기업과 수출경험 및 해외진출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해외진출기회를 주고, 수출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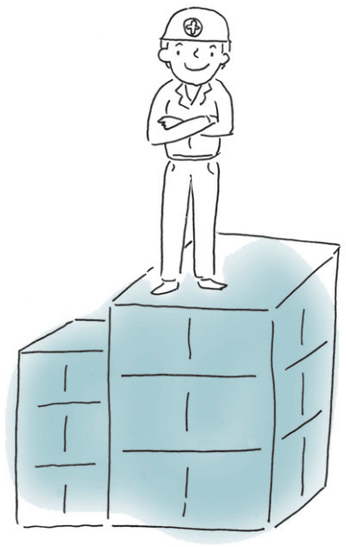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해외시장정보 제공 · 디자인개발·상품홍보·수출마케팅 지원 등 사업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매년 1,500개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중소기업청, KOTRA 등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받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교역 중심지에서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이 현지 마케팅 전문가, 법률·회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사무공간의 공동활용 등 해외진출 초기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출인큐베이터 설치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 무역협회 등의 무역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중소기업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보완하고, 중소기업중앙회·무역협회 등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하는 한편, KOTRA 해외무역관의 중소기업수출대행 기능을 더욱 보강하겠습니다.

(FQ)04한 나라 본 책(134~177) 2008.3.29 4:17 AM 페이지174 western

■ 개별 중소기업 차원에서 시장개척이 어려운 소비시장, 또는 유통구조가 복잡한 선진국 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해외바이어상담회를 개최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신규거래선 발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상사 등 대기업과의 수출상담회를 확대 개최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인프라 확충

수출활동 참여 중소기업은 7만 3,154개로 전체 중소제조업의 21.6%에 불과('06년 말)한 실정입니다. 현재 수출중소기업도 환율·원자재, 환경규제 및 세계경기 둔화 등 국내외 환경변화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 해외진출지원거점을 확충하여 현지 네트워킹을 강화하겠습니다. BRICs 등 신흥유망시장 중심의 해외진출지원거점의 확충을 통해 현지법인설립, 마케팅, 기술협력, 사무공간 등을 종합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해외무역관과 수출 BI 등 현지지원거점(사업)간 연계지원 및 공동협력사업 확대를 통해 중국 등 현지진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 '글로벌아웃소싱지원센터'를 통해 다국적 기업이 발주하는 아웃소싱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적격의 중소기업을 매칭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KOTRA, 무역협회 등의 해외바이어들의 아웃소싱 발주정보 수집 및 분석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아웃소싱상품 생산 중소기업 발굴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FQ)04한 나라 본 책(134~177) 2008.3.29 4:17 AM 페이지176 western

벤처기업의 글로벌시장 전략적 진출 지원

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은 국가경제의 미래성장동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틀이 됩니다. 벤처 중소기업들의 제품이 전 세계시장에서 우수성을 인정받도록 각종 기술개발 및 마케팅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 **민간 중심의 '(재)글로벌네트워크('08년 1월 설립)'를 활용, 전세계 한인 네트워크 구축과 벤처기업 글로벌 기술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전세계 한인 비즈니스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국내 유망 기술제품 발굴, 전문매니저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판매전략 개발 및 대행을 추진하겠습니다.

■ **미국시장에 대한 전략적 진출을 위해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인 SBIR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SBIR 지원단(교포교수·연구원 등) 구성 및 미국 현지법인 설립 지원 등 전략적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겠습니다.

■ **글로벌전략품목 등 수출유망품목 위주의 시장다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해외바이어별 맞춤식 R&D시범사업을 통해 수출상품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겠습니다.

